

김정관 산업부 장관 “광주 반도체 입지, 기업이 최종 선택”

정부 압박식 선 긋고 선정 과정 공개…각종 의혹 해소 “군공항 부지, 전력·용수 공급과 신속한 착공에 유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사진)이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광주 입지 결정 과정과 관련해 정부가 복수의 후보지를 제안했으며, 최종 선택은 투자 기업이 내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광주를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누가 먼저 제안했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다양한 부지를 정부가 제안한 것은 맞고, 부지를 선정한 것은 기업이 최종적으

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 생산기지가 필요했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를 정부가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발표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의 선후 관계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나왔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클러스터 발표 이후인 지난달 29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의결이 이뤄진 점을 들어 “관련 절차를 밟기 전에 발표부터 한 것 아니냐”고



“기업이 생산시설을 지을 부지가 필요했고, 정부가 기업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는 형태였다”고 답했다.

정부나 산업부가 기업에 광주를 선택하도록 압박했는지를 묻는 질의도 이어졌다.

백해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 부지 결정 과정에서 정부나 산업부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묻자 김 장관은 “이 문제가 정치

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현재 사업이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결을 거쳐 최종 입지를 확정하는 단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적으로 논의되는 데 대해 당혹스럽다”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기업에는 하루라도 빨리 들어갈 수 있고 전력과 용수를 다른 지역보다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으며, 비교적 빠르게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기업의 조건이 광주와 맞아떨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든 국가균형발전을 비롯한 여러 정책적 조건이 부합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광주 군공항 부지가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신속하게 조성할 수 있는 입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광주 군공항 부지는 토지 사용 문제가 없고 평탄한 300만평 규모의 부

지를 확보할 수 있다”며 “이 정도 규모의 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았고, 전력과 용수도 현재 가장 빠르게 확보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제시한 2029년 호남권 반도체 랩 1차 완공 목표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이 국가 반도체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목표 달성 가능성을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도체 경쟁력을 잃을 것 같다”며 “일본 구마모토와 중국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업계에서도 최대한 서둘러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산업·제조·반도체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부 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2029년이나 2030년도 늦다는 생각”이라며 조속한 기반시설 조성과 착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도 정부 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장관은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긴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화이트칼라 이그젠션과 유연근무시간제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랩의 2029년 1차 완공을 목표로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전력·용수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 첨단기술모형 관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보고회에 앞서 양자컴퓨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전남 각 지역별 ‘맞춤형 처방’ 필요

전남연구원, 교통문화지수·사고 데이터 연계 관리 제안 “취약지역, 경찰청 등 유관기관 참여 맞춤형설립 제공을”

전남지역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통문화지수와 사고 통계를 연계한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교통사고 취약지역을 매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개선 성과를 평가·지원사업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남연구원은 12일 ‘2025년 교통문화지수에 따른 교통안전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JN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맞춤형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리포트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전에 실시된 조사를 토대로 작성했으며, 분석 대상은 종전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다.

교통문화지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운전행태와 보행행태, 교통안전 수준 등을 조사해 지역의 교통안전 의식과 문화를 수치화한 지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5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종전 전남의 시 지역에서는 순천시가 86.6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어 여수시 83.02점, 나주시 82.73점, 광양시 82.68점으로 그룹 평균을 웃돌았다.

군 지역에서는 보성군이 86.37점으로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으며, 화순군은 82.01점으로 B등급에 올랐다.

전남연구원은 교통사고 대부분이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과 신호위반 등 인적 요

인에서 비롯되는 만큼 교통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문화 개선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교통문화지수를 단순한 지역별 순위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안전 수준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을 진단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 추진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안전 행정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통문화지수와 교통사고 통계를 결합한 지역 맞춤형 성과관리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매년 교통안전 취약지역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교통문화지수 개선 정도와 교통사고 감소 실적을 기초자치단체 평가 및 지원사업과 연계해 자발적인 정책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취약지역에는 전문가와 한국교통안전

공단, 전남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현장 진단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통문화지수와 사고 통계뿐만 아니라 교통량, 고령인구, 교통약자 분포 등의 자료를 종합해 지역별 위험요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위험도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고 발생 이후 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 제거하는 예방 중심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기초자치단체 교통안전 부서를 중심으로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해 모범은 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여하는 ‘지역 교통안전 협의체’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동 현장점검과 사업 성과평가도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특별시 조직개편 노사협의 종료

4차 회의서 기획·예산·인사 기능 분산안 ‘공감’ 세부 배치는 여전히 이견…내주 설명회·입법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이 청사별 기능 배치를 둘러싼 노조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공식 협의를 마무리했다.

광주특별시는 12일 오전 무안청사에서 황기연 행정부시장과 고헌안 안전민생부시장, 전남·광주 지역 3개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4차 노사공동협의체를 갖고, 청사별 기능 배치와 조직개편 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4월과 7월에 이어 4번째 논의 자리였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참석자들은 기획·예산·인사·조직·총무 등 기관 유지 기능을 청사별로 나눠 배치하는 데는 일부 공감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청사에 어떻게 배치할지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기획 업무는 광주청사, 예산 업무는 무안청사, 인사 업무는 광주와 무안청사에 각각 두는 방안이 제시됐고, 이에 대해 대체로 공감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으로 부서 배치를 어떻게 할지를 두고 이견이 있으며, 광주청사 노조는 근무지 보장과 핵심 기능 유지, 전남청사 노조는 핵심 부서의 전남 배치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 의견이 여전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직원 의견 수렴이 우선돼야 한다며 설명회 개최도 요구했다.

이에 통합시는 노사협의체 회의를 일단 마무리하고 노조가 요구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조직개편 입법예고 기간에도 직원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할 방침이다.

광주특별시는 오는 14일 노사협의의 7차 회의록을 검토하고, 노조가 요구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 주 입법예고와 함께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정호 광주 공무원 노조위원장은 “광주·전남 양 청사의 초안을 가지고 단일안을 만들기는 했으나 의견 차이가 여전히 있다”며 “설명회도 개최하고, 입법예고 기간에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반도체 사업 성공 핵심은 인재·인력 키우는 일

▶1면에서 호남권에서는 전남대와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핵심 참여대학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지역에서 서울대 수준의 반도체 교육을 받는 것은 물론 서울대 클린룸을 활용한 실습과 공동 연구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교육을 받아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기업 입장에서든 생산시설이 들어설 지역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직접 육성, 안정적 인력 공급 기반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호남권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작업으로 꼽힌다. 나아가 정부는 지역 맞춤형 인력 양성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랩 건설과 자동화 설비 구축, 클린룸 시공, 생산장비 설치와 운영, 유지보수, 품질관리, 전력설비 운영 등 생산 현장을 책임질 기술인력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노동부는 반도체 투자 일정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역 대학과 주요 기업에 반도체 공동훈련

센터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협력업체 재직자와 신규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 산업이 생산공정뿐 아니라 전력과 자동화 설비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융합형 기술인력을 요구하는 산업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됐던 인력 및 인재 확보다. 정부와 지자체, 교육계, 산업계가 그리는 방향으로만 인재 육성이 진행된다면 상당 부분 약점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 반도체 생태계의 현실화가 전정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교육과 연구, 직업훈련, 기업 채용이 지역과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800조 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는 지역 경제 지형을 바꿀 역사적 과업이며, 성공의 핵심은 결국 인재와 인력을 키우는 일”이라며 “공장과 장비 등 물리적 인프라 이상으로 중요한 인재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해 다음 세대가 지역에서 첨단 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